

시·군·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142
----------	-----

제출년월일 : 2005. 7. 14

발 의 자 : 이근선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 지난 6월 30일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으로
- 지방의회의 본질인 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써 기초단위의 생활정치와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예측되는 바 이를 반대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당의 개입으로 인한 음성적인 공천현금제 부활, 평가르기식 선거 등 깨끗한 생활정치에 반하는 사항들이 예측되는 바,
- 지방의회의 본질인 집행기관 견제기능 약화와 지방행정기능의 본질상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방분권에도 크게 역행할 것임.
- 세부 건의내용 : 붙임 건의서 참조

시·군·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건의(안)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의 골격이,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인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 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들로 심히 우려되어, 우리 달성군의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정당공천제 도입은 현재와 같이 격심한 정당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지역구도가 토착화된 시점에 이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며 또한 정당개입으로 편가르기식 선거, 기초의원 장악, 음성적인 공천헌금제 부활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며,

둘째, 중선거구제 도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도·농복합지역의 읍·면단위의 열악한 환경등으로 주민들은 여러측면에서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읍·면간, 씨족간 갈등이 또다시 초래될 뿐 아니라,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읍·면·동의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것이며,

셋째, 의원정수 20%감축과 비례대표 10%선출시는 결국 현 선출 의원 정수의 30%가 감축되는 결과로, 이는 결국 의회기능을 약화시켜, 집행부 견제등의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어, 지방의회제도가 후퇴될 것이며,

넷째, 유급제 도입에 있어서는 도입취지를 모르는바 아니나, 현재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도입이 맞지 않으며, 구체적인 보수 규정은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나 언론보도 수준을 볼 때 지역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됨.

이상과 같은 문제점 외에도 이제 겨우 기초단위의 생활정치와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시행될 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분권과 혁신에도 맞지 않으며

결국은 지방자치가 후퇴할 것이 명약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의 뜻을 대신하여 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현행법률대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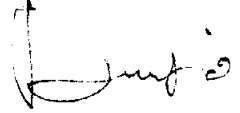
2005. 7. 14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시·군·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 이근선 의원 외 2인 발의 -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이 근 선	이근선	
도 원 길	도원길	
배 도 순	배도순	